

“50년 정치宗家 지키자” 비장

■내일 韓대표 확정판결... 민주당 긴장 최고조

22일 이뤄질 대법원의 한화갑 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확정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추후 이뤄질 정계개편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비장한’ 분위기=당의 위기에 대한 긴장감과 결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비장함이 공존하고 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 보자는 입장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 늘 단결해왔던 50년 전통의 종가급 정당의 지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흐르고 있다. 특히 경선자금 수사와 재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당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근태 현 의장 등도 경선 자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한화갑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8일부터 여의도 민주당 사 앞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자발적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유죄 확정땐 심각한 내분 예고

무죄 환송땐 정계개편 주도권

수사 형평성 촉구 촛불집회 당원 결집

지난 19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김효석 원내대표는 “경선자금 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화갑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당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민주당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당 내부적으로는 ‘22일 대법원 앞에서 모이자’는 사발 통문까지 나돌고 있다.

22일 대법원 앞에는 2천여명이 넘는 당원들이 모일 것으로 전망되며 한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청와대 앞 항의 시위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진로=대법원이 한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민주당은 말 그대로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

송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할 경우, 한 대표가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표직도 유지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당법 등을 들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는 정당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 경우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현역의원들과 당헌·당규대로 장상 대표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며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당직자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특히,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친 고건으로 알려진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어 경우에 따라 심각한 내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최근 측근 인사에게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원만한 타결전

이 도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계개편 영향=정치권이 한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과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 정계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심점을 상실한 민주당이 자체 내분 등으로 정계개편의 원심력에 빨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일부 세력과 고건 전 총리 등과의 제3지대에서의 통합신당 창당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생각이 다르다. 한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이는 호남지역 민심에 상당한 반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동정론이 불고 내부 단결로 민주당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회고 2006

FTA시대, 불안한 농도

수입쌀 식탁까지 점령 “이대론 쌀농사 끝장”

경기침체로 모든 국민들이 움츠러들었던 2006년. 그 가운데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한 농민들의 고충은 더욱 컸다.

추곡수매제가 폐지와 쌀 관세 찾기가 어려워진 터에 올 4월부터 밥쌀용 수입쌀 관세가 허용됐다. 여기에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소식에 농민들의 어깨는 더욱 처졌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연장 대신에 올해 평균 쌀소비량의 4%(20만 5천t)인 쌀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똑같은 비율로 늘려 2014년에는 7.96%(40만 8천700t)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허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도 허용됐다.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데 들러온 한·미 FTA 협정 추진 소식에 농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의 대미 공산품 수출이 원활해지는 대신 미국의 농산물을 받아들여야하는 FTA가 체결되면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의 농민들은 또 한번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세계 농업대국인 미국의 농산물이 관세부담 없이 들이닥칠 경우 농업과 농촌의 피해는 상상키 어려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쌀만큼은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이같은 농민들의 불안감은 대규모 폭력시위로 번졌다. 지난 11월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석한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 1만 2천여명은 수입개방과 FTA 추진에 대한 불만을 시위로 표출했다.

한미 FTA 협상 불안감 가중

추곡수매제도 폐지 ‘이중고’

시판 초기 ‘찬밥’ 취급을 받던 밥쌀용 수입쌀은 품질이 대등한 중국산과 미국산 칼로스 등이 대량소비처를 중심으로 소리소문없이 불티나게 팔렸다. 올해 국내에 들어온 밥쌀용 수입쌀은 모두 5만 6천986t(2005년분 2만 2천557t 포함). 농민들은 목포와 여수 등 전국 곳곳에서 수입쌀 하역과 입고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수입개방이라는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06년도분 수입쌀 3만 4천여t이 내년 1~5월 다시 반입될 예정이어서 우리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포도와 사과 등 과일과 함께, 고추를 비롯한 양념류의 수입량도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어 가뜩이나 여건이 어려운 우리 농업을 옥죄고 있다.

농촌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도의 인구분포 상황은 더욱 악화돼 농업현장도 갈수록 폐쇄되고 있다. 노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17.7%)인 전남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14세 이하 청소년 인구를 초과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농업생산력도 그만큼 떨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기에 빠진 전남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친환경농업이 시행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관료문제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벼농사에만 집중되고 각종 지원책도 미비한 것으로 평가됐다. 친환경농업이 아직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반증한 것이다. 시련이 더욱 컸던 2006년, 농도 전남은 하무도 편할 날이 없었다. <끝>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농도 전남은 수입쌀 시판과 한미 FTA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전남 농민들이 지난 10월 광주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소비도시 광주 생산·수출도시 자리매김”

박광태 광주시장 송년 간담회

박광태(사진) 광주시장은 20일 “지난 한해 동안 경제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에 주력해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보다 큰 성과는 만년 소비도시였던 광주가 생산·수출도시로 확실히 자리잡게 됐다”며 “기아자동차 생산규모 확대, 삼성전자 가전라인 등 디지털 가전산업 집적화, 270개 규모의 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급성장하고 디자인·첨단부품소재·신에너지·문화콘텐츠·정밀금형 등 5대 신기술 응용산업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영상복합문화관, 문화콘텐츠 테마 타운 건립사업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하지만 어려운 재정형편 등으로 시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시민들과 함께 ‘잘 사는 1등 광주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inews@kwangju.co.kr

광주시의회 초선의원 84%

재산 불성실 신고

올해 광주시의회에 첫 입성한 초선의원 대부분이 재산을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신고 대상 시의원 13명에 대한 실사 결과 84.6%인 11명이 불성실 신고로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누락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6천만원 미만과 1천만원 미만이 각 3명씩이었다. 성실하게 신고를 한 의원은 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단 2명에 불과했다. 특히 모의원의 경우 2억원이 넘는 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기다림... 행복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분좋은 만남...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순천시 순천대로 1000
전화: 061-770-1111
팩스: 061-770-1112
홈페이지: www.sunchon.ac.kr